

2011. 12. 28.

## 보도자료

이 자료는 2012년 12월 31일(월) 조건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

KDI 홍보팀

TEL 02) 958-4030 FAX 02) 960-0652 E-mail press@kdi.re.kr

#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주요 현황과 위험도 평가 : 차주단위 자료를 중심으로

김영일 KDI 연구위원 · 변동준 KCB 책임연구원

## 1. 연구의 의의

- 본 연구에서는 CB(Credit Bureau)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한국경제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언급되는 가계부채의 주요 현황과 위험도를 평가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함.
- CB 자료는 개인별 대출현황과 연체 등에 대한 미시적 정보를 포괄하므로 가계부채의 위험도 분석에 유용
- 가계부채의 취약성을 주요 항목별로 평가하였으며, 특히 부실 위험이 비교적 큰 채무자의 현황과 특징을 중심으로 분석
- 본고에서 제시한 금융업권과 차입자 특성에 따른 가계부채의 취약성 분석 결과는 부채구조조정의 방향과 위험관리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.

## 2. 연구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

-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, 과다 채무 비중이 증가하고, 미시적 수준의 채무조정이 약화되는 등 가계부채의 질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.
  - 해당 기간 중 차입자의 채무부담이 증가하는 가운데 과다채무자의 부채액 비중 또한 확대됨.
  - 특히, 저소득 채무자, 자영업종사 채무자, 하위 신용등급 중 7등급에 속한 채무자 비중과, 대출업권별로는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함.
  - 이러한 현상은 경기둔화가 심화될 경우, 가계부문 부실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.
- 특히, 저신용등급 채무자, 과다채무자, 비은행권 채무를 보유한 다중채무자, 자영업종사 채무자 등의 부실위험이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남.
  - 저소득 · 저신용의 취약차주 수가 적지 않기 때문에, 거시경제적 여건이 악화될 경우 연체자 수가 증가하는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.
    - 그러나 이들의 부채액 규모가 전체 부채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은 편이므로 금융안정성 측면의 부담은 비교적 작아 보임.
- 연령대별로는 50대 이상 채무자의 부실위험이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연령층에 대해서는 금융안정성 측면의 대응과 더불어 일자리 대책을 병행해야 할 것임.
  -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등 인구구조 변화 및 자영업자 증가세와 맞물려 50대 이상 채무자의 부실위험이 확대될 수 있음.

□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, 거시경제 여건이 악화될 경우, 비은행권 차입자, 자영업자, 다중채무자의 부실이 상대적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.

○ 거시경제 여건이 악화될 경우, 채무자의 부채상환부담이 일정 하더라도 금융시장 상황 등의 악화로 인해 개인부문의 신용위험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음.

○ 이처럼 거시경제 여건이 급격히 악화될 경우에 가계부채의 단기적 부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수 있어야 함.

□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비은행권 채무를 보유한 다중채무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금융감독 사각지대 축소의 필요성을 시사

○ 대출업권별로는 비은행권의 빠른 대출 증가세와 취약성을 고려, 비은행권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해야 함.

○ 특히, 신용등급별로는 하위 신용 등급에 해당하는 신용 7등급의 부실위험관리 및 채무조정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임.

□ 가계 부문 부실위험 축소를 위해서는 임기응변적인 대응보다는 중·장기적인 부채구조조정 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, 단기적인 부실위험관리에도 주력해야 함.

○ 단기간의 부채조정 시도는 부채축소의 부정적 영향을 심화할 수 있으므로 보다 중·장기적인 시계(time horizon)에서 부채조정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함.

- 급격한 부채축소는 자산가치 하락과 소비위축 등을 야기함으로써 실물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음.

- 이에 거시적으로는 명목부채 증가율이 명목소득 증가율 아래에서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한편,

- 미시적으로는 금융기관의 가계부문 대출 시 소득 등 상환능력을 고려한 대출관행이 확립되도록 유도함으로써 가계부문의 부채상환능력을 제고해야 함.
- 또한 가계부채 부실이 취약차주와 취약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실현될 수 있으므로, 이들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 단기적인 위험관리에도 주력해야 함.

❖ 문 의: 김영일 KDI 거시·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(02-958-4084)